

## 發表 및 討論要旨

### 제 1 회의—I

사회자 : 金達中

발표자 : 柳錫烈

토론자 : 李禎秀, 畢英賢

### 發 表

柳錫烈 : 북한의 개방화와 정치관제를 분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原稿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북한은 점진적인 문호개방을 위해서 대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북한의 개방화 준비과정은 정치제도적인 측면과 주민생활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문호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방침을 밝힌 후에, 후속조치로서의 제도 및 인사개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 이전 북한은 외국과 극히 제한된 접촉을 했으며, 그것도 공산국가들에게 한정을 시켰었는데, 1970년에 들어서면서 부터 근대화를 추구하고, 해외로부터 선진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5년 김일성은 평양공장 지배인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만 의존한다면 만족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원료와 기계를 수입해 들여올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1980년 제 6차 당대회에서도 김일성은 말하기를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더 발전시키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인 1984년 6월에 들어서서, 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동남아권과의 무역증진을 하겠다든지, 공산권과 5~6년간에 무역량을 10배로 신장한다든지, 무역토대 확장, 또는 기술교류 및 경제학자의 확대를 위해서, 비수교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방침을 밝힌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이와같은 문호개방은 최고지도자들의 방침을 밝힌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정부제도와 인사를 개편해나간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내에서는 북한개방 문제를 두고, 이념과 혁명을 추구하는 강경파세력과 북한의 경제건설을 모든 부분보다 우선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제관료들이 오랫동안 정책상 이견(異見)을 보여왔던 것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강경파세력들은 체제에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인사개편 등을 착수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부터 북한은 연로한 경제관료들을 권력의 핵심위치권에서 제거하고, 젊은 층 경제관료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개방화를 점차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면모를 바꾸었던 것이다. 북한은 1983년 4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7기 2차회의에서 의장단 3명을 전부 교체했다. 신임의장에 양영섭, 부의장에 여연구, 손성필을 선출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이미지를 쇄신시킨 것이다. 이것은 전의장단의 노령으로 비활동적이기 때문에, 장년 층의 신임의 장단으로 교체해서 민주회의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사회의 점진적 개방에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문호개방준비로 해서, 이미 실패한 중공업중심의 경제개혁을 경공업 위주로 바꾸어가지고, 교역품 생산으로 대외경제 교류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당 제 6기 8차 전원회의에서 안승학을 당중앙회의 경공업담당 비서로 발탁하는 한편, 경제관료 및 경공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시켜나갈 수 있는 홍성룡, 김복신 등도 기용하고 경제개방

을 위한 점진적인 준비를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1983년 1월에 중공업전문가로서 2차 7개년계획을 주도 해온 이종욱 총리를 해임시키고, 실무파 Technocrats 중에서도 이종욱보다 국제감각이 뛰어난 수송전문가인 강성산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정부는 중앙인민회의 산하에 기존의 제1경제회의와 제2경제회의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단일기구로 조정해서 대외경제와 무역을 담당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대외경제활동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능도 정부에 맡김으로써, 북한의 대외개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종욱 총리를 당상무위원회에서 해임시키고, 정부의 부주석단위로 임명한 것도 부주석단위에 경제대변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부조직이라든지 인사개편을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에 기술연수생을 파견시켜 문호개방 준비를 갖추었다. 1984년 북한은 570명에 달하는 기술연수생을 해외에 파견했고, 1985년에 들어서서는 약 1000명을 소련·동구권 뿐만 아니라, 서방제국에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기술연수생 해외파견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북한의 산업시설 노후화라든지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앞으로 대서방 문호개방에 대비해서 서방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을 보다 적극화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개방을 앞두고 주민의 생활필생산의 증대를 통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한편, 경공업발전을 통한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에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인 중공업중심 정책을 수정 해서, 경공업중심으로 바꾸고,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 대해서 선차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집일성은 84년 신년사를 통해서 5개지구 전선에 기본건설을 추진

한다든지, 주민들의 수준향상, 소비품 증산을 통해서 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 혁명과 기타 농업경제의 기계화 및 주택공급 증대를 강조한 것이다. 김정일의 이와같은 경공업혁명 발언과 함께, 김정일은 84년 3월 31일, 오진우와 김복신 등 당정간부들을 대동하고,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참관했으며, 8월 3일에 또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참관했는데, 이날 참관에는 당과 정무원의 경제인물들 대거 대동했던 것이다. 여기서 김정일은 “인민 생활의 향상은 당활동의 최고 원칙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른바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민생활적인 측면에서, 개방을 옹호한 또 하나의 내적 준비가 있었는데,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일 지도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승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사회의 개방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에 앞서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철저히 강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의 지도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권력세습에 비판적인 세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제거시키고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대치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당의 정책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당중앙위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권력세습에 비판적인 김일파 이종욱이 탈락되었고, 군부내에서는 반김정일세력인 노간부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상징적인 자리로 물러나고, 오진우, 박학림, 김두남, 오국렬 등이 기용되어 김정일체제 확립을 위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내에는 경제발전에 최우선을 둔 실용적인 경제관료들을 밀어내고, 안승학, 홍성룡, 강성산 등의 경제관료를 동용하여 김정일 권력체제의 유지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민들의 김정일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일의 업적을 과시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김정일 세습체제의 최대 취약성은 정통성의 결여로

써 김정일은 자신의 정통성과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질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고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향한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미 김정일은 경제부문에서 경공업혁명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향상을 약속하고 있고, 대외경제개방을 통해서 북한경제활성화를 목적하고 있다. 대남관계에서 김정일은 통일의 위업을 한몸에 걸머진 통일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를 비롯한 남북한의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교환등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고,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의 지도력을 받아들여서 권력승계에 대한 정통성을 확립한다면, 북한개방이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위협적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확고한 기반 위에 선 김정일의 체제는 북한개방을 보다 자신있게 추진할 것이다.

1984년 9월 8일,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 및 합작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개방선언으로써 “合營法”을 채택하고 이를 선포했다. 이는 개방을 통한 중공의 현대화추진과 1979년에 채택된 중공의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개방화의 전략적 목표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데 있다. 북한은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철저한 내핍생활의 강요와 혁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통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종래의 강압적 방법과 공산국가에만 의존하는 폐쇄정책으로서는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방선진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러한 계기로 美·日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가들과 정치적 접근을 꾀하자는데 있다. 합영을 통해서 서방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접근은 정치의 교적인 전단계의 접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미단독회담이나 남한·북한·미국 3자회담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셋째, 북한은 문호개방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능력, 즉 대남공격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서방 문호개방정책을 대소 최신무기도입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안보능력, 즉 대남공격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넷째, 북한은 김정일 권력승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은 오늘날 북한의 권력 대부분을 장악해서 북한주민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권력을 계승할 만한 정통성이나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일이 없어서 주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개방정책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생필품향상을 위한 경공업혁명과 문호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정일의 업적으로 계산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착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국력분산,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적화침략의 마지막 기회로 삼을 것이다. 특히 1980 년대에 들어선 한국의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서방문호개방 및 평화로 위장한다면, 북한이 기대하는 결정적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화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1인독재체제는 개방화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큰 정치적 영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대외관계에서 주체사상이란 모든 대외문제를 독자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개방화도 이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주된 목적이 침체된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주체사상에서의 경제적 자립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경제적 자립이란 외세에 의한 경제적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국제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영법에 의한 해외자본·기술을 유치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얻는 것과 경제교류를 갖는 것은 주체사상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폐쇄정책이건 개방정책이건 최고권력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주체사상에 의해서 정당화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화는 주체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단지 개방화에 맞춰 주체사상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일만 남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체제가 온전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폐쇄사회가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여건개선을 위해서 사회를 개방해야 할 여건에 처해 있으며, 사회가 개방되려면 필연적으로 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방을 통해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순조로운 권력승계 등을 포함한 체제의 강화에 있다. 그리고 개방화과정에서 침투될 자유사상이 체제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체제에 손상을 주지 않을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체제의 탈피를 위해서 체제유지와 김정일 권력승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쇄적인 자력경쟁 노선으로부터 점진적인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해서, 외국에 선별적이고도 제한된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의 이미지나 최하위 대외신용도라든지, 투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획일적 통제사회, 외채상환 불이행 등으로 해외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 때,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침략성 약화라는 목표아래, 북한의 개방정책 정착화를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합영의 실적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서방국가들로부터 점진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은 그들의 체제에 영향을 주어서 개방화에 적응하는 체제의 재정립과정을 거치

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해서 대남강경노선을 완화시키고,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게 될 때 우리의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討 論

**畢英賢** : 1984년 9월 평양정권이 **合營法**를 발표한 이후, 서방국가와 경제, 과학, 기술교류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자주독립 경제체제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서방사람들이 북한을 스탈린식 공산주의 국가로 여겨왔다. 그래서 북한의 개방정책도 한번에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서방에서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자료가 많지도 않고 또 체계적 논문도 많지 않다. 그래서 柳교수의 논문을 읽고 나서 느낀 몇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해볼까 한다.

첫번째는 논문의 서술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것이고, 문제해석이 요점을 제대로 지적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국가 연구는 제한된 자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柳교수의 논문은 그것을 잘 인용했다고 본다. 두번째는 논문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북한 개방정책의 시대적 배경, 권력투쟁, 경제운영 방법, 주민들의 생활면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세번째 저자의 연구분석 태도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주관성의 탈피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을 柳교수께 질문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권력파벌분류에 있어서, 柳교수께서는 김정일을 강경파로 규정하셨는데, 다른 자료에는 김정일이 대외개방정책을 주도하는 경제 기술관료파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북한의 개방정책의 원인 가운데, 대내적 정치원인보다 대외적 정치 원인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의 개방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탈피하고,

중소의뢰에서 벗어나며, 서방과의 관계나, 중공개방정책의 자극, 또는 남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영향 등을 보다 상세하게 확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셋째 전망의 범위, 즉 그 정책의 성공여부나, 그 제한성, 개방정책과 주체사상과의 모순성, 소련의 입장, 이데올로기의 순수성 등의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李禎秀** : 부족한 자료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정리해주셔서 시사를 받은 바가 많은데, 몇가지 문제를 질문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내적 정치상황과 개방화정책의 불가피성을 보다 밀도있게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柳교수께서는 개방화정책을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셨지만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시켜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등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둘째 강경파(군부)와 온건파(전문가)와의 관계에서 보면, 강경파가 체제유지를 위해서 일시적 정책으로 개방화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강경파 보다는 전문가그룹(온건파)의 주장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란다. 셋째 개방화가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강경파가 개방화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어보고 싶다.

**邵玉銘** : 공산국가의 개방정책과 개혁면에 있어서 기본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소련이 1917년에서 1928년까지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서방의 과학기술, 자본을 끌어들이어 성공한 결과, 현재는 가장 큰 적으로 등장했다. 중공도 소련과 같이 서방의 과학기술,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는 불변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개방화정책이 성공해서 국력이 배로된다고 해도 그 이데올로기는 불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산국가들이 경제개방정책을 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전망은 절대 금물이다. 이점을 꼭 인식해주었으면 좋

있다.

**高崇雲** : 김정일의 개방정책과 정통성과의 관련에서, 국력이 확장되면 남한에 대한 결정적 시기라고 하며 중시하고 있다. 김정일파가 오진우 등의 군부세력과 손을 잡고, 한편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확장을 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제개방정책을 피한다고 해서 북한의 혁명노선이 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남침가능성이 줄어들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答 辯

**柳錫烈** : 좋은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먼저 畢 박사 질문부터 답변하겠다. 첫째 김정일이 강경파냐 온건파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김정일이 강경파라고 본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대내적으로 권력기반을 다져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며, 대외적인 기술협력의 문제는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정책의 외재적 원인을 중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제에 맞추다 보니 대외적인 면이 소홀해진 것 같다. 셋째 개방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성공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방정책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순수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방한다고 해서 주체사상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석의 문제가 달라질 것이며, 모순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李頎秀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개방화에 있어서 주민들의 체제저항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즉 주민들이 각성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버마 랭구운사태

이후, 강경파가 후퇴하고 김정일이 온건파에 편승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강경파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태도만 약간 바뀌어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강경파가 득세한다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대국적으로 볼 때 남북대화나 평화공존의 방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邵박사께서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견해도 이데올로기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그리고 高박사의 질문중에, 북한이 개방화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바뀔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체제유지를 위해서 평화공존정책을 취하면서도, 국력이 강해지면 언제라도 침범할 수 있는 적화노선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본다.

## 제 1 회의—Ⅱ

사회자 : 金達中

발표자 : 趙先運

토론자 : 徐鎮英, 曹伯一

## 發 表

**趙先運 :** 中共의 「대외개방정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의 한 측면으로써 단순경제적 영역의 개방을 가리키며, 정치·문화·사회 등의 영역에 이르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부르조아계급의 정신오염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저절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한번의 汚染을 제거하는 투쟁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제영역의 개방 역시 공산

당원들의 투쟁이유가 되고 있다. 그들의 분류에 의하면 현재 세계경제의 구성과 형세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美國을 대표로 하는 발달한 資本主義國家, 둘째 蘇聯과 東歐國家, 셋째 社會主義國家, 넷째 開發途上國家로 분류하고 있다. 4개의 큰 부분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투쟁적인데, 최후의 결과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매우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주의가 세계 범위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외개방정책도 상호의존관계 중에 利益을 얻고 상호투쟁 중에 승리를 획득한다고 믿는다.

4분류의 구성과 형세분석에 의하면 中共은 社會主義國家에 입각하여 3가지 측면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국가에 대한 개방의 지도적인 思想은 레닌의 “貨貨政策”과 스탈린의 “두개의 병립한 市場의 理論,” 그리고 毛澤東의 “3개의 世界區分의 理論”에서 연유한다. 그 정책목표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연계(聯繫)를 이용함으로써 政權을 공고히 하고, 經濟를 개선할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며, 실제적 업무는 총력을 경주하고, 외화를 쟁취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된다.

둘째, 蘇聯과 東歐國家에 대한 개방의 지도적 사상은 中共이 최근에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은 고정적인 패턴이 없다”라는 理論에 근거한다. 이 이론은 중공으로 하여금 중전의 소련 공산당과의 이념논쟁을 피하게 했고, 사회주의 국가와 기술합작의 길을 열었다. 특히 소련이 중공의 제 1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진립하였던 156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기술개조는 아마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들 프로젝트의 기술개조는 바로 중공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방은 毛澤東의 제 3세계이론과 南南協力の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은 이런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거래를 전개하는 동시에 현행 국제경제제도를 개조하여 세계경제의 신질서를 수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國際階級투쟁을 전개한

다는 뜻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교하여 고찰해보면, 경제 무역거래실적의 숫자적 측면에서는 日本과 美國, 그리고 西歐가 현재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으나, 경제 무역액수의 성장을 방면에서는 소련이 바로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공과 소련 사이의 경제 무역실적이 배로 증가한 것은 비록 기본적인 액수가 매우 낮고,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쌍방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역시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중공의 3개 방면에 대한 개방정책이 모두 鄧小平이 創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련과 동구국가에 대한 개방은 실제로는 중공이 종전에 원래부터 개방했다가 폐쇄했던 門戶를 점차로 다시 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제 3세계에 대한 개방은 단지 毛澤東의 제 3세계전략의 지속적인 추구일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국가에 대한 개방은 역시 毛澤東 時代에 시작된 것이다.

鄧小平은 毛澤東과 周恩來가 개척한 기초위에서 확대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鄧小平路線의 政策的 특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등소평일파는 1978년 中國共產黨 第11期 中央委員會 3次 中央委 全體會議로부터, 초보적으로 결정 채택한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활성화 이후,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沿海의 港口都市를 개방하는 방면에서 개설, 확대, 또는 돌연히 부분적인 잠정연기 등을 반복했으며, 대외적으로 경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면에서는 거듭 일방적인 협정 폐기를 선언하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외개방정책의 축소와 확대는 실제로 鄧小平, 胡耀邦 등 소수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므로 그 尺度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대외개방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경제특구를 영도하는 기구와 무역회사 등은 실제로는 鄧小平一派가 새로 만든 경제 관료 체제로써 결코 단순한 기업조직은 아니다. 그리고 鄧小平일파의 대외개방정책은 여러면에서 비판과 반대를 받고 있어, 그때마다 양보하고 타협했으며, 그

사이에는 더욱 많은 파악하기 어려운 變數들이 있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중공의 대외개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개의 세계 시장, 즉, 자본주의시장과 사회주의 시장이 병존하고 있다는 理論에서 출발하여, 資本主義市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社會主義經濟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첫째 二重性인데, 자본주의 정치체제와는 대립하고 경제체제는 서로 협조하여, 경제적 이익 획득을 통해 정치적 투쟁의 조건을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策略性인데, 경제 무역으로써 선봉을 삼아 국제적으로 계급투쟁을 전개, 추진 하며, 국제적인 반패권 통일전선과 포리관계를 이루어 국제정치에서 우세한 지위를 쟁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反復性인데, 중공은 지난 30년 동안 갈팡질팡하며, 확대와 축소가 일정하지 않게 전개해왔다. 지금은 동구와 서구, 양쪽과 교통하고 왕래하며, 양면에서 이익을 도모하고, 대미관계가 이미 타개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이제 고개를 돌려 대소관계를 개선하려고 꾀한다.

넷째 無常性인데, 대외개방정책은 경제 체제개혁의 총체적 작업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체제개혁은今後 5년안에는 여전히 일정한 형태로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도기간 동안 자연히 많은 무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局限性인데, 중공의 모든 사회주의체제 가운데 경제체제는 일정한 역할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단지 경제적 영역에서만 대외개방정책을 실행하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전처럼 계속해서 폐쇄함으로써 역할기능과의 충돌이 조성 될 것이다. 따라서 對外開放政策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본다.

## 討 論

曹伯一：趙선생의 논문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언

을까 한다. 첫째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확고한 理論의 정립이 없기 때문에, 중공의 개방화정책을 거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趙先聲씨에서는 개방화정책을 주로 경제개혁에 치중해서 말했었는데, 본인이 보기에 정치·문화 등의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제개혁 외에 정치 문화 등의 방면에 대해서 개방정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鄧단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련이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 성공한 다음 가장 큰 적으로 변한 것과 같이, 日本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믿어진다. 넷째, 사회배경과 정책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해주었으면 한다. 즉 대만과 중공의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위기 공산주의 애매론 정책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다섯째 결론부분의 5가지 특성 가운데, 책략성과 반복성, 반복성과 무상성에 대해서 보다 확연하게 구분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북한 중공을 막론하고 공산주의 사회질서가 개편되려면 사회전체, 제도, 사회내부의 상호기능 등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徐鎮英** : 본인은 넓은 의미에서, Continuity 와 Change 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중공에 있어서 澤毛東시대의 사회주의와 鄧小平시대의 사회주의가 내용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이 前時代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조언을 바란다.

다음으로 개방화정책의 정도를 객관적 수치, 즉 대외무역의 총량의 변화 등으로 표시해보고 그 변화이유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양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화의 측면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리라 생각된다. 이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陳定中** : 중공개방정책의 특성을 몇가지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중공개방정책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보여지며 다음으로 중공의 체제개혁과 개방정책을 부패하고 늙은 관리들이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해있다는 것이다. 이 세력이 차후에도 개방정책에 변수로 작용하리라 보여진다.

### 答 辯

**趙先運** : 曹伯一박사의 의견에 대해서, 현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전반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쇠퇴이며, 자유반공국가에게는 좋은 반론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공의 체제개혁은 중공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자발적인 개혁이며, 거기에 鄧小平의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다음에 중공은 개방화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변천, 제도, 상호기능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좌파세력의 연구분석이 매우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徐교수의 사회주의 연속성과 변화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이 논문을 연속성(Continuity)에 중점을 두어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중공은 두가지의 노선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 제2회의—I

사회자 : 曹伯一

발표자 : 李泰旭

토론자 : 朴熊緒, 趙倩

## 發 表

**李泰旭** :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개방화 정책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책전환 이전에는 김일성부자의 유일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고자 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자립정책이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당했다. 이에 경제자립의 한계성을 크게 느낀 북한당국은 1984년 9월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合營法”을 제정하여 개방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개방화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말할 수 있지만, 경제에서의 개방화란 넓은 의미로는 경제 행위주체가 자기욕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분권화된 시장경제 체제의 요인을 도입한다는 뜻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제경제협력 관계에서 소극적인 행위에서 적극적인 행위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러한 개방경제정책을 택하게 되었는가의 필연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경제파탄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파탄이 김일성 부자세습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중공과 동구권의 개방화의 영향이 작용했다고도 보여진다.

그리고 개방의 필연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은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대외지향적인 반면,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 입각한 대내지향적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이론상 북한정부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북한의 소극경제에서 중공업우선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은 자명하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해외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외국자본의 도입, 수출시장의 증대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은 合營法을 제정하여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을 보면 국내 시장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개방화정책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개방화정책을 추진했는데,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개방화와는 모순이며, 독재적 장기집권의 군사우선 정책과 경제합리성과는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으로 보아도, 중공은 북한 개방을 종용한다 하더라도, 소련은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막기 위해 개방을 방해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단기적으로는 대내적 여건이 개방화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내수시장 협소, 전문경영인 부족, 기술낙후, 재원부족, 외채누증 등으로 경제협력에 서방제국이 냉담한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점진적 여건조성과 주민적응이 가능하고, 중공의 5년의 성과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반된 딜레마에 있으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망도 달라지리라 여겨진다.

## 討 論

朴熊禧: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合營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신 李泰旭교수의 노고에 치하드린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바란다. 첫째 경제개방화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 보면, 현재 북한내부의 세력은 실용주의적인 온건노선과 극좌적인 강경노선이 있는데, 개방화정책의 추진을 실용주의적인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정책전환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경제성장의 달성방법으로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던져본다. 둘째 김일성의 합법성은 전혀 정치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여지며,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셋째 개방화 자체가 북한의 현정권의 유지와 모순된 점이 있다. 개방화정책이나 경제성장의 도모는 김정일 정권의 정권세습을 위한 수단도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趙 倩** : 李교수의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중공은 사상적으로는 극좌사상, 행동적으로는 극우사상을 가지고 있어 상호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陳雲 등의 반대파가 경제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중공과 마찬가지로 나쁜 영향이 나타나리라고 여겨진다. 중공이 신경제체제—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와의 혼합—를 실시한 이후 약간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폐단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畢英賢** : 북한 경제개방정책은 개방화를 통한 경제발전 목적에 있지 않고, 정치적 목적, 즉 국제적인 권위를 높이거나 정권확립 등에 있다는 것이다.

**邵玉銘** :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즉 미군이 철수하는 방법은, 엄중한 전쟁위협이 있을 때나 북한의 평화 공세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적화노선이 위장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대내외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결정적 시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믿어진다.

### 答 辯

**李泰旭** : 토론자 질문자 여러분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朴熊緒 박사께서 질문해주신 것 중, 북한이 근본적으로 폐쇄경제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1960년 이전에는 폐쇄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해외의존의 필요성을 느껴, 1단계로 사회주의 시장에 개방하고, 2단계로 제 3제국과 대외무역관계를 확대하며, 3단계로 북한의 체제를 인

정해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근본적인 폐쇄경제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 다음으로 趙傳교수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개방화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했다.

**李相禹** : 李泰旭교수께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된 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중공과 북한의 개방화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공은 개방화와 동시에 경제체제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공사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만 추진하고 있고, 체제개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추진한 것은 경제외적인 목적, 즉 미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제 2 회의—I

사회자 : 曹伯一

발표자 : 邊裕淵

토론자 : 朴熊緒, 陳定中

## 發 表

**邊裕淵** : 1978년 이전의 중공경제는 계획경제체제 아래, “자급자족·자력갱생”의 발전정책을 채택하였으므로, 대외무역이 경제활동 가운데 접하는 비율이 낮았다. 30년의 폐쇄경제가 중국대륙에 드러낸 것은 가난하고 궁핍함, 그리고 뒤떨어진 국면이었으며, 인민의 기본적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함을 보였고, 인심과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였다.

중공의 영도당국은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차 정권의 안정도 위급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978년 2월 중공이 개최한 5기人大 1차회의에서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현대화

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또한 1982년의 “中共 12人大”에서는 금세기 末에는 농업과 공업의 총산출액이 4배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때의 개인평균 소득은 800달러에서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공의 4개현대화 목표달성의 최대 제한요소는 制度 이외에도 人才·資金 등이다. 외국의 자본, 기술, 지식을 빌리어서 그것으로 대륙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978년 12월 개최된 黨 11期 3中全會에서는 대내적 활성화를 피하고 대외적 개방을 한다는 경제정책을 결정하여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중공이 대외무역강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중공의 4개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한 것이다.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로 외국의 기술과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으며, 힘을 다하여 수출을 확장하면서 채택하고 있는 조치들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첫째 경제특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중공은 1980년을 기하여 계속해서 深圳, 珠海, 汕頭, 廈門의 4개 경제특구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대륙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배합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켜서 장차 이런 생산품이 세계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면 외화를 벌어들이고 발전자금의 來源으로 된다는 것이다. 합자경영, 합작경영, 보상무역, 원료가공 등의 방식을 통해서 자금과 관리의 지식, 생산기술의 흡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의 다른 경제체제의 완충지대가 되었다. 중공이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5년의 실험이 지난 뒤에 중공에서 만족함을 주어, 1984년 다시 연해 4개 城市를 경제개발구로 개방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공은 대륙내부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양자강 삼각주, 주장 삼각주, 양자강상류 경제구와 동북경제구를 획정하였다.

둘째 석유의 연합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을 들 수 있다. 중공의 채무신용은 1982년 세계 100개 은행 가운데 26위이고, 1983년 유럽화회 500개 은행 가운데 24위이며, 1984년에 이르러서는 20위로 올라섰다. 따라서 서방 금융기구는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중공에 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대륙붕 석유개발계획에 흡수되는 외국자본이 가장 많다.

셋째 오일달러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중공은 1982년 부터 오일달러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쿠웨이트와 차관조약을 맺고 3,500만 달러를 도입하였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자율이 겨우 2%이고 상환기간도 20년이라는 것이다. 중공이 현재 쿠웨이트와 맺고있는 차관은 모두 3억 달러이다. 이외에도 기타 산유국차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넷째 조세감면 혜택으로 외국기술을 흡수하고 있다. 중공은 외국회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술투입을 하도록 조세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조세를 감해주거나 면세해주는 기술이전의 신청은 중공의 발전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법규의 정리를 들 수 있다. 중공의 경제관계 법규가 완비되지 않아서 외국기업들은 충분한 보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광망상태에 있었다. 중공은 우선 1979년 7월 “중의합자경영법”을 공포하였고, 1980년 7월 “경제법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경제법규의 의결제정을 책임지웠다. 또한 관제있는 투자국가와 “투자보증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권익을 보장하였다.

여섯째 전문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국제채권을 발행하였다. 중공은 외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2년에 “중국투자은행”을 설치 외자 도입의 중개기구로 만들었다. 국제채권시장에 발행한 채권은 자금모집으로써 이미 일본의 엔화채권과 마르크채권을 발행하였다.

일곱번째 대외무역의 체제를 개혁했다. 과거 중공의 수출입 업무는 대외무역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국영회사들이 경영하였기 때문에 효율이 없었다. 1979년 부터 계속하여 고치고, 변화한 주요한 조치들은 ①지방의 대외무역 권한의 확대, ②정치와 기업을 분리하며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③무역회사를 독립채산제로 하였고, ④대리제도를 도입하고, ⑤수출입 허가제도를 실시하였다.

여덟번째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과거에 중

공은 외화가 부족하여 대외무역에서도 수출은 중요시하고 수입은 제한하였다. 후에 기술과 설비의 수입이 공업을 발달시키는 필요수단임을 알게 되자, 수입으로 수출을 늘인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근년의 맹목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하강하게 되자, 지금은 다시 수입을 억제하고 무역과의 결합원칙으로 국산화비율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신용 대부장려와 외환보류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외에도 노동력수출과 해외투자사업 종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종사하는 사업은 자원개발과 공업생산, 가공설계 등이다.

중공은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자원사용의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을 증가하였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그 개방지역도 점차 4개경제특구에서 연해도시로 확대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내륙에까지 확장되었다. 1979년 부터 1984년 까지 중공이 이용한 외국자본은 이미 협의조약이 체결된 금액 누계가 280억달러에 달하고, 그중 이미 사용한 외자는 167억 달러에 이른다. 4개 경제특구가 외국상사와 협의한 투자금액은 20억달러에 달하고, 실제로 사용된 것은 8.4억달러이다. 그리고 深圳경제특구의 공업생산액은 1979년 6천만 RMb(人民幣)에서 1984년에는 18억 RMb(人民幣)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일단의 폐단도 생겨났는데, 경제범죄, 투자의 중복, 내부노선의 투쟁 등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여전히 그들에게 긍정되고 있다.

대륙의 일부 인사들의 반대가 물론 있으나, 현재 권력자인 鄧小平은 경제특구의 건립 정책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대륙의 대외개방 정책은 굳게 지켜져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개방과정에서 조심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谷牧도, “개방 정책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개방정책이 더욱 효율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강화된 관리와 경제 입법의 강화, 각종 전문인력의 양성, 좋지 않은 폐단과 병리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도 중공은 계속해서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개방의 정도는 그 내부의 정치세

력의 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討 論

**朴熊緒** :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바란다. 전망에서 중공성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한 낙관을 피력하고 계신데, 21 세기에 중공경제의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陳定中** : 우선 중공이 아무리 개방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의 양체제를 앞서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공개방정책은 그 결과에 만족해서라기 보다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방정책이 관료들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료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성공여부는 관료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비판적 입장은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자도입은 제한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 등 불안요소가 많아 반대파의 압력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개방정책은 중국·한국의 양체제를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고 믿는다.

## 答 辯

**邊裕淵** : 먼저 朴熊緒박사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21 세기의 전망에 대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이상은 쉽게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人才·技術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陳定中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중공의 외자도입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경제개발과 더불어 앞으로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 확신한다.

**曹伯一** : 시간적 제약으로 토론은 여기서 끝내고, 이 회의의 두가지 결론은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기초이론인 경제가 변화하면 상층구조도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회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1985년 9월 23일 鄧小平과 陳雲의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에서의 담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중공의 개방정책의 중요한 구체적 자료가 나타나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 제 3회의—I

사회자 : 韓昇洲

발표자 : 安秉俊

토론자 : 丁世茲, 朱松柏

### 發 表

**安秉俊** :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교정책이 변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과 전략은 불변이지만 성취방법이나 전술에는 다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북한도 안보, 승인, 위신, 경제번영 등을 국가이익으로 추구해왔으며, 남북한 대결로 正統性도 중시해왔다. 둘째 북한은 제 3세계를 중시하다가 4강(美·日·中·蘇)에 중요성을 두고,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술을 취하고 있다. 셋째 최근의 정책변화에서 경제와 국내정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 체제안보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통성을 부인했으나, 1980년에 들어서 부드러운 미소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北韓外交에서 미군철수를 관철시키고, 대중소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1984년 1월의 3자회담 등은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에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최신무기를 도입한 것 등은 대중소 군사협력관계의 좋은 예이다. 다음으로 제 3세계에 대한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承認을 얻고 國威를 떨치고자 했다. 그러나 1984년 버마 랭구운 사태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실추되고 제 3세계에서 외면당하자, 다시 주변 4강으로 중점을 옮겼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자력갱생, 자급자족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즉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여, 서방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맺어 해외의 무역, 투자 및 기술관계를 확대하려고 했다. 중공의 실용주의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북한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韓國과의 체제경쟁을 위해서, 外交關係에서도 正統性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체제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이른바 聯邦制에 의한 통일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일의 계승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얻으려고 한다. 本稿에서의 新外交政策이란 이와같이 전술적이고도 스타일면에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북한의외교정책에서의 새로운 추세와 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친소화경향을 들 수 있는데, 과거 40여년간 소련에 불평·불만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소련과의 혁명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이 1984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소련지도자들은 김일성과 전략적인 견해를 같이 했으며, 東北亞에서 미일군사협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남북한 외교관계에서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얻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그 인상을 개선하여 대미접촉과 투자요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대화나 적십자회담 등에서 생산적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대외적으로 안보, 승인, 번영, 및 정통성의 확보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되찾고, 미일 및 서방국가들과 교류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1984년 부터 개방정책을 시도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펴하고 있다. 폐쇄·경직된 사회체제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 및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투자와 기술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문화, 체육 및 선전에도 관심을 쏟

는 外交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접촉과 교류를 시도 하면서, 국제질서와 관습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은 스타일의 변화가 새로운 추세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外交정책에 있어서 스타일의 변화를 내용의 변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힘의 균형과 일관성있는 한미협력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된다면, 북한이 진실로 혁명과 전쟁을 포기하는 외교정책을 택할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북한의외교정책의 전망도 주어진 환경과 북한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 및 경제환경은 보다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에서 아직도 강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순수성과 집체적이고 혁명적인 외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전망은 역시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보여진다.

## 討 論

丁世鉉 : 安교수의 논문에서 많은 방향제시와 시사를 받았다.

첫째 북한의외교관계의 새로운 추세나 경향, 방향 등에 관해서 상관관계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북한의외교정책의 방향 중 친소화 경향을 지적해주었는데, 소련과의 군사적 협력은 북한외교의 유연성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스타일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억지, 평화정착이라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외교정책상 북한내부의 내부적 요인이 변하고 난 다음에 평화정착이나 전쟁억지 등의 외부정책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외교정책상의 스타일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김일성의 사망여부, 김정일의 승계성공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安교수의 견해를 듣고 싶다.

朱松柏 : 安교수의 논문을 읽고 북한의외교정책의 여러가지 점에서 배운 바

가 매우 많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를 질문해보고 싶다.

첫째 북한의 친소정책, 남북대화, 개방정책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오다,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고 여겨진다. 둘째 북한의 외교상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경제이익추구로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넷째로 외교를 이용해서 자기 정권의 공고화를 꾀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북한의 친소화경향은 안교수의 지적 외에 중공과 한국의 관계개선이나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섯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개인숭배, 주체사상, 1인독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방화정책을 취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집행능력, 남북대화의 전망, 중소의 남북한 교체승인의 태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畢英賢** : 안교수의 견해 외에 김정일 제승문제로 친소화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외교정책의 목표중 正統性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국제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다. 또 현대화도 사회주의 현대화, 즉 정치적인 민주화·현대화 없이 추진되는 현대화라고 생각된다.

**趙 倩** : 북한외교정책의 전망 가운데 개방정책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여러가지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공과 북한의 외교상 본질적인 것은 변한 것이 없다고 본다.

### 答 辯

**安秉俊** : 좋은 질문과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질문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하겠다. 첫째, 北韓의 국내정세와 外交政策, 특히 中·蘇關係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美·日 및 西方國家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開放政策을 취하고 있으나, 체제안보적인 면에서는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최신무기를 도입하고 蘇聯과의 혁명적 유대관계를 강조함으로써 美日의 軍事協力關係에 대처하

고자 하였다. 둘째, 스타일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김일성의 사망여부와 김정일의 승계성공여부와 같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韓半島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힘의 균형으로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는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北韓의 親蘇化경향과 中共・韓國 關係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北韓이 최근에 와서 노골적으로 親蘇化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中共과 韓國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東北亞에서의 美日의 군사적력에 소련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北韓의 開放政策과 正統性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체제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용주의적인 개방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제 3 회의—Ⅱ

사회자 : 韓昇洲

발표자 : 葉伯棠

토론자 : 柳世熙, 洪茂雄

### 發 表

葉伯棠 : 최근 鄧小平에 의하면, 중공은 80년대에 수행해야 할 세가지 과업이 있는데,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4개현대화 건설을 수행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개현대화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공은 개방정책을 실시했으며, 本稿에서는 중공의 개방정책이 외교에 미친 영향을 논술하려고 한다.

1982년 9월 1일 중공 당총서기 胡耀邦은 중국공산당 제 12차 대표대회의 보고 가운데서 “이후 당과 국가의 중점은 경제건설로 옮겨질 것이다”라

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1984년 1월 중공국무원 부총리인 姚依林은 중국대륙의 경제발전 목표에 대하여, 대외개방정책은 기본적인 국가정책이며, 이후의 정책은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외자를 흡수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모든 우호적인 국가들과 무역, 경제, 그리고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해 2월 10일 중공 국무원은 전국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하며 이후 경제협력의 중점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영역을 넓히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개조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자와 과학기술 도입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 4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연해의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중공 경제정책의 변화는 상호연관적으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외교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바로 서구 공업국가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한 점이다. 1984년과 1985년 6월 趙紫陽 총리가 2차에 걸쳐 서구를 방문함으로써 중공이 서구 공업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공이 특별히 서구를 중시하는 까닭은 서구제국이 비교적 진보적 기술과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고, 서구의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대륙의 낙후된 경제, 특히 에너지, 교통, 통신, 전자제품과 그 재료면울 개발하고 나아가 40여만개 현존기업의 기술개조를 진행시키는 것이 현재 중공의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대외개방정책 실시의 최대 영향은 소련과 동구집단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이라고 믿어진다. 비록 중공이 여전히 반패권주의를 3대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선포하고는 있으나, 결코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며 단지 구호로써 외칠 뿐이다. 1982년 10월 부터 중공과 소련은 제1라운드 협상을 거행했는데, 쌍방 협상의 중점은 경제협력의 토론이었다. 1983년 3월 쌍방은 모스크바에서 제2라운드 회담을 거행했는데, 동회의에서 과학기

술의 교환방법과 쌍방 무역액의 증가에 중점에 두었다. 이 두차례 협상의 결과로 쌍방은 국경무역을 개방하기로 합의했고, 동시에 중공은 소련의 철도를 이용하여 대륙의 화물을 유럽과 중동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쌍방의 무역액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과거에 중공의 동구국가에 대한 외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추구되었었는데, 현재는 점점 더 경제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의 미국과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문제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즉 중공은 미국의 대중화민국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과 과학, 기술 및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중공의 방직제품을 얼마나 수입하느냐 하는 것이 중공 방직공업의 성장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日本과의 대외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日本의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쌍방의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수입초과 현상이 두드러져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중공의 南南協力이라고 하는 제3세계와의 정책도 경제협력 위주로 될 것이며, 중동지역과 동남아국가 등과의 무역이 중점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中共의 개방정책의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공의 수입초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외환보유율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자도입이나 수출입 등이 중공의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의 실패가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의 개방정책의 좌절로 인하여 대륙경제의 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대외정책이 개편될 가능성도 많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정세는 좀더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討 論

柳世熙: 본인이 葉선생의 論文을 읽고 느낀 점을 코멘트와 질문을 섞어

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중공의 대외정책 중에서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셨는데,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을 도입할 때 매우 선별적이라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다. 다음으로 교역확대할 때 전 GNP의 10%로 제한하려고 했지만 1984년부터 깨어졌다. 또한 경제교류의 다변현상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서방제국과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재에는 美·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葉 선생의 논문은 사실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외정책의 커다란 의미의 해석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경제개방정책의 美國·日本·蘇聯 등에 미칠 영향을 좀더 명료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洪茂雄: 葉 박사 논문을 읽고 느낀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볼까 한다. 중공이 개방정책을 취한 이후 대외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대외관계의 전모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인용한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특히 중공의 대외관계가 서방으로 전환한 것에 동의한다. 鄧小平과 胡耀邦은 똑같이 구라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공개방정책을 전후해서의 대외관계를 보다 자세히 비교해주었으면 좋겠다.

### 答 辯

葉伯樂: 중공의 국가이익의 근본목표는 정권의 안정에 있다. 여기에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이 있다. 기술도입의 선별, 南南協力, 그리고 제 3 세계국가에 대한 평등호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외교정책을 논할 때, Framework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Approach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공산주의란 처음에 책략을 생각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Framework를 가지고 할 수가 없으며, Approach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洪茂雄 선생의 잘못된 자료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며,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 제 4 회의—I

사회자 : 畢英賢

발표자 : 趙政男

토론자 : 尹璟泰, 高崇雲

## 發 表

**趙政男** : 본인은 관심대상을 「鄧小平文選」이라는 자료에 한정시키고 접근방법을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중공의 등소평체제 통치이념을 개방적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관심영역의 확대”와 체제운영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의 증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공산체제의 통치이념이나 체제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개방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단선적인 이념목표와 도식적인 체제유지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체제가 그들의 체제유지 과정에서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개방적 성격에는 커다란 한계점이 있다. 이념적인 면에서 관심영역의 확대가 이념의 벽을 뛰어넘거나, 체제유지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이 그들 체제의 中軸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산체제는 생존과 발전을 지향하면서도, 체제존립의 논거를 버리지 않는다. 이점에서 공산체제의 개방정책의 한계를 알 수 있다. 등소평체제의 통치이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개념을 이상이념, 현실이념, 실천목표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理想理念은 본래 실질적 의미 보다는 명목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강한 단위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체제유지의 규범적 가치와 아울러 그들 체제의 지향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으로 특정 이념체제의 전반적인 성격을 개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이라는 세가지 개별이념들을 하나의 복합적 구조를 가진 단일개념으로 형성시키고 있다. 그리고 毛澤東思想을 상징적 명목적 위치로 格上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구속력을 벗어나고 있다. 또한 필

요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그들의 정치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원칙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現實理念의 단위로 설정된 사회민주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鄧體制 통치이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추상성의 측면보다는 구체성의 측면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같이 社會民主主義가 갖는 복합성으로 인하여 그들 체제 당국자는 다양한 내용의 정책과 노선을 동시에 갖고서 유연성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實踐目標로서의 鄧小平체제의 통치이념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적 개방성이다. 이러한 개방성은 實事求是로 보는 입장에서 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현대화라 할 수 있는 대외개방, 전문성의 제고 등의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속성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毛澤東이 중국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론과 실제간의 연계를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중간이념 단위로써 과도기적이고 복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實事求是의 명분을 이용하여 대외개방의 확대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討 論

尹璟泰 : 趙教授의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해보고자 한다. 먼저 社會主義民主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단계 운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需要分析的 비판이 있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동소평체제의 이상이념이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모택동사상의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格上되고 있는데, 어째서 중국의 현실권자인 동소평이 모택동사상을 이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高崇雲 : 趙선생의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의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습강화를 趙교수께서 설정한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사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7차 5개년계획 중에서 정신문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내의 부정부패와 정치방면에서의 思想의 강화와 관련시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공산주의에서의 사회주의민주와 서방자본주의에서의 민주주의의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주의민주에 대해서 중공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 한계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趙교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 答 辯

趙政男 : 이 논문은 아직 가설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고, 두분의 코멘트는 우정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사회주의민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이념조작이 불가하며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상 상황에서 불완전하게나마,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조작 과정에서 나타난 한가지 양태로 보며,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셋째 공산주의 통치이념의 과도기적 개념단위로 보기도 한다.

둘째 毛澤東思想이 理想理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 鄧小平이 평하듯이 그렇게 상위개념은 아니다. 본인이 理想理念으로 格上된다고 하는 것은 체제의 과도기성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편법으로 볼 수 있다. 鄧小平 자신으로서도 체제에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上位개념으로 말할 뿐이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더 보완해서 고치도록 하겠다.

### 제 4 회의의 一

사회자 : 畢英賢

발표자 : 薩公強

토론자 : 朴斗福, 劉勝驥

## 發 表

薩公強: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개혁정책을 떼어놓고 대내혁명노선에 대한 개방정책의 충격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충격은 다음의 4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理性主義의 충격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민들은 30여년간의 중공폭정 아래에서 온갖 고통을 맛보았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아가서 대외개방정책은 중공의 제세적인 愚民竹幕을 타파했고, 사회현상의 강렬한 요청은 억만군중으로 하여금 理性主義와 각성을 격발시켰다. 그것은 하나의 강대한 역량을 형성했고, 중공이 30여년간 정성껏 만들어낸 전체 상층구조에 대해 날로 큰 충격과 동요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억만군중의 이성주의적 각성을 관이 허가한 제도에 집어넣기 위해 중공은 자아부정식의 방침을 채택했다. 소위 「理論과 實際」라는 문장을 발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미 지났다며, 그 이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 이론적 수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생산을 부국의 표적으로 삼는다. ② 개체경제를 부활하고 자본주의의 경제를 도입한다. 이 두가지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필수적이며, 유익한 보충으로 삼는다. ③ 이윤을 생산력의 유인으로 삼고 시장조절로 계획경제의 결점을 보충한다. ④ 고용을 허가하고 노동력을 수출하며 과학연구의 성과를 매매하고 체력 노동과 두뇌 노동을 상품화한다. ⑤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며, 국내에서는 금융채권의 발행과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⑥ 중국 국경내에 치외법권이 없는 경제특구라는 조제를 개설한다. ⑦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여 외자를 끌어들인다. ⑧ 중외합자 내지는 외국기업의 독점투자 형식의 기업을 만든다. 그러나 중공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또 중공창건의 敎義에 귀의함으로 인해 四個堅持의 포기를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공공산당의 각성을 억만대중의 이성주의 각성과 같은 입장에서 거론할 수는 없으나,

중공의 각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종교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공산주의에 대한 現實主義의 충격을 들 수 있다. 대외개방과 상품 경제의 발전을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消息과 자금의 유통을 증진시켰다. 대량의 鄉·鎮級 기업과 소도시의 흥기, 그리고 제 3차산업의 발달 등은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우울하고 침체되고 경직된 국면이 타개되자 전체 사회는 혼돈을 거듭했고,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중공의 정책이 불안정하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방황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공산주의에 헌신한다는 열정을 잃어버렸고, 하루 하루 지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셋째 公有制度에 대한 私有意識의 충격을 들 수 있다. 문화대혁명의 고통과 서방의 제도 및 문화의 충격을 경험한 中國 國民들은 自我意識과 個性의 해방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人間으로 돌아가자, 또는 인간된 대우를 받아라는 강렬한 요구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 지위, 존엄을 긍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말살한 과거의 모든 유습을 폐지하며, 민주·자유·인권·법치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공은 이러한 영향을 소멸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르조아제급의 자유화 경향 반대,” “정신오염제거” 등의 운동을 추진했었지만, 모두 다 용두사미적인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 원인은 自我意識, 즉 私有意識의 집중적 표출에 있다 하겠으며, 私有意識의 대두는 바로 중공의 대내활성화, 대외개방의 필연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自我意識을 제거하려면 개혁을 포기해야만 하고 후퇴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후퇴를 택한다면 그것은 중공정권에 대해 더욱 큰 위협부담을 줄 것이다. 중공의 유일한 가능한 방법은 집체주의적 사상과 정치공작을 강화하고 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선전과 설교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기공의 파괴와 당의 부패변질을 들 수 있다. 중공이 대외 개방 대내활성화 정책을 수행한 이래, 경제효율 및 이익을 강구한다는 기치 아래 중국 대륙은 朝野의 上下를 불문하고 모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기풍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中共黨幹部들의 이러한 퇴폐적 행동은 鄧小平의 實務派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퇴폐풍조의 만연은 陳雲이나 薄一波 등에게 반대 구실을 제공했으며 실무파와 반대파 사이의 모순투쟁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鄧小平은 그의 개혁구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욱 교묘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경제면에서 개혁의 순리적인 진행을 위해 각종 간섭을 감소하고 조심스럽고 온당한 방침을 채택했으며 극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감정적 퇴보를 서슴치 않았다. 둘째 정치면에서는 간부의 노령화를 전략적 책략으로 제출하면서 연로한 회의파나 개혁에 비협조적인 당원들을 퇴진시키고 자기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 鄧小平은 1985년 9월 개최된 제 12기 4중전회에서 일시에 142명의 고급간부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몰아냈는데, 그것은 鄧의 개혁을 더욱 순리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鄧小平이 이러한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모험적인 착오를 범할지도 모른다.

경제의 기초적 개혁은 상층구조의 상응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인데, 만약 정치개혁이 없다면 경제개혁의 추진도 매우 힘들 것이다. 중공은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정치개혁안을 내세우지 못하므로 경제개혁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사실상 중공이 계속해서 「4개堅持」를 고수한다면 정치개혁도 잠정적인 정치적 표현에 불과할 것이라 믿어진다.

## 討 論

朴斗福: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몇가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먼저 毛澤東시대부터 鄧小平시대로 오면서 제급투쟁의 형태라든가 혁명노선이 변화했는데, 중국인의 사고패턴, 도덕, 가치관 등에 미친 충격이나 영

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중공의 작성과 이성주의적 대중의 작성에는 근본적인 차이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분화 시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중공의 경제체제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劉勝驥** :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얘기해볼까 한다. 먼저 이 논문은 자료와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다음에 한가지 바라는 것은 中共에 있어서 개방화와 혁명노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즉 역사유물주의와 변증유물주의와 중국의 상하층구조와의 유기적인 연구결과를 경제개혁과의 연관 속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다.

**金遠中** :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소감을 발표해볼까 한다. 먼저 경제개발 정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저축은 저하되자 중공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Business System 이 다원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데, 그 경우 중공의 사회주의체제는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정책으로 과학기술이나 해외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외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적 환경에 빨리 적응해나가야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이라 보여진다.

### 答 辯

**薩公強** : 먼저 여러분의 의견, 충고에 감사드린다. 명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朴斗福선생의 중국공산당의 작성과 이성주의적 작성과의 관련성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 양자의 입장은 상호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李相鳳**(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長) : “중공과 북한의 개방화”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한국의 여러 학자들의 진지한 토론에 감사드

립니다. 특별히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더우기 한국인에게 중공의 개방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을 깨우쳐주신 중국인 여러분께 한국인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이나 토론 내용은 1986년 봄에 출판될 「東亞研究」 8집에 모두 게재하겠습니다. 토론내용은 東亞研究所에서 나온 洪雲杓氏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논문을 수정하실 분은 연말까지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성공을 후원해주신 국토통일원의 尹璟泰연구관님, 李鳳朝보좌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시종일관 통역을 위해 애써주신 崔寬藏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통역을 도와주신 국토통일원의 손인섭 氏께도 감사드립니다.